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 어떻게 될까

# 1차 탈락 9명 ... 추가 6~7명 예상

### 낙천대상 의원 일간지 보도에 일파만파 이르면 내일, 늦어도 9일께 발표 가능성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 명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 주변에서는 살생부 명단이 떠돌면서 이름이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낙천 대상 명단 파문=공심위는 공천 혁명을 내세우며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 3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지도, 의정 만족도, 제출마 지지도, 17대 총선투표 성향, 지역구내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현직 여론조사를 토대로 의정활동 평가지수를 산출한 뒤 A~D 등급으로 나뉘어 하위 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30%의 현역의원을 공천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3명, 광주·전남지역 6명의 현역의원이 각각 1차 공천에서 낙천의 고배를 마실 처지에 놓였다.

특히, 3일 한 일간지가 낙천 대상

현역의원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전혀 근거 없는 자료"라고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선 미확인 살생부가 함께 나올면서 오히려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낙천 대상 및 물갈이 폭은=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영동연 의원의 불출마가 물갈이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약간의 유동적인 면이 있다.

전남의 살생부 명단은 광주에 비해 변동폭이 크다. 광주지역의 물갈이 대상 명단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반면 전남지역의 경우 2명은 동일하게 나오나 나머지 1명은 다르게 나오며 많게는 5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은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음해성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피력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종 호남 물갈이 폭은 일단 30%의 물갈이가 기본이지만 2, 3차 심사를 거치면 최종적으로는 5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3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회의에서 "모 일간지에 보도된 호남지역 공천탈락 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괴문서다"고 밝히고 있다.

◇낙천 대상 발표 시기=공심위는 4일 비리·부정 전격자 탈락을 위한 구체적 공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4일 공천 기준 발표와 함께 낙천 대상 현역의원 명단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보고 등을

감안할때 이르면 오는 5일이나 6일 이 시작, 15일께 최종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라공천은 광주·전남지역 경쟁전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이뤄진다면 하더라도 1~2곳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예비 후보자간의 합의 등을

거쳐 11일~14일께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 15일께 최종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라공천은 광주·전남지역 경쟁전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이뤄진다면 하더라도 1~2곳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예비 후보자간의 합의 등을

## 장관 '경륜'·차관 '실무'

### ■ 새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이명박 정부의 '제1기 국정'을 이끌고 갈 청와대 및 내각 진용은 경륜있는 장관급과 실무능력을 갖춘 차관급을 조화롭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장관급은 주로 60대의 측근 인사들을 배치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주안점을 둔 반면, 차관급은 대부분 50대 내부 인사들을 승진 기용해 업무연속성과 정책추진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지했고, 고대와 연대가 각각 6명과 4명으로 나타났다.

◇50대 주축, 측근 靑·내각 대거 합류=연령별로는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명이 50대로 나타나 새 정부의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관급의 평균 연령은 60.6세로 '이순 내각'이라는 말이 나왔다. 11명이 60대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4명은 50였다. 부처 차관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54세로 장관보다 6살 낮았다. 60대는 김종현 국방차관과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관 등 2명에 그쳤다.

영남 28명, 서울·경기 28명, 호남 18명

측근 대거 합류 ... 장관급 평균 60.6세

◇영남, 서울대 출신=새 정부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94명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2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경기 출신 인사는 모두 28명으로 영남과 같았고 이어 ▲호남 18명 ▲충청 13명 ▲강원·제주 5명 ▲이북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94명 가운데 당선인 비서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엠티(MB)'들이 모두 37명에 달했다.

◇관료출신 약진, 운동권 퇴진=차관급 이상 53명 가운데 TK지역 출신은 10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차관급 이상 및 비서관 등 94명 가운데 관료출신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자(18명), 언론인(9명), 정치인(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출신 인사는 모두 28명으로 영남과 같았고 이어 ▲호남 18명 ▲충청 13명 ▲강원·제주 5명 ▲이북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3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고려대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관급 이상 53명만 놓고 보면 서울대가 26명으로 절반을

노무현정부 시절 급부상했던 운동권 출신은 항공대 총학생 회장을 지낸 이태규 연설기록비서관이 유일하다.

## 이만의 장관·정남준 차관 임명

### 광주시, 지역발전 가교역할 기대

2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광주시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이 신인 각료로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만의(62) 환경부장관 내정자와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이 각각 담양과 광주 출신으로 지역 현안에 밝다는 점 때문에 지역 발전의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활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행정안전부 2차관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2년여동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 현 정부에서 광주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료로 꼽힌다. 특히 정 차관은 지역발전 정책, 지방교부세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돼 그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담양 출신으로 지난 1991년 1월부터 1992년 1월까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1994년 9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또 목포시장과 여천시장을 지내는 등 이 지역과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관료다.

그는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행시 동기(23회)로 박 수석이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깊은 교분을 나눈 오기도 했다.

양희주 광주시정책기획관은 "무엇보다 광주시장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장·차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각종 지역현안과 관련된 대 정부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환경통인'인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광주전·영산강 수질보전을 비롯한 지역 환경정책에 긍정적인 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행정안전부 2차관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2년여동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 현 정부에서 광주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료로 꼽힌다. 특히 정 차관은 지역발전 정책, 지방교부세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돼 그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李大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3일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최근 4개월 연속 3%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대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이에 비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2005년 이후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되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조기폐지로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유류비·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남주홍 전 통일장관 등 3명의 각료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야당의 반발로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 15명 '성원'(成員) 규정을 맞추기 위해 직전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참석하는 다소 '기형적' 형태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강 잡기=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부터

##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라” 지시

### ‘8시 국무회의’ ‘현장업무’ 등 지침 시달도

▲8시 국무회의 ▲부처 이기주의 극복 ▲주요과제 이행상황 매월 확인 ▲현장중심 업무 추진 ▲창의적 사고 이기주의 극복 ▲주요과제 이행상황 매월 확인 ▲현장중심 업무 추진 ▲창의적 사고 ▲전 공무원 국정방향 공유 등 ‘근무지침’을 시달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8개월 참석해 봤는데 총리께서(사정이) 된다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열어 어떤까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시간을 참여 정부 시절 오전 9시30분에서 1시30분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난상토론을 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 오후에 열어 밤늦도록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언했다.

◇서민경제 대책=이 대통령은 서민경제 대책마련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불과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관련한 장비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요금 억제에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을 억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대중 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인상 억제)를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2-722-0100